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나아갈 길



이 균 범  
동신대학교 총장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은 각종 지표에서 보듯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의 난립으로 인해 지방대학을 위시한 일부 대학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입학자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학 수는 인구 대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우리의 대학들은 입학정원 역전시대의 양적 팽창에 따라 급격한 질적 수준 저하로 대학경쟁력 약화는 물론 정원수 채우기에 급급하여 사실상 진정한 대학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말았다. 특히 지방의 일부 대학들은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너무 많은 대학과 학과를 인가해 정원을 대폭 허용한 정부 당국과 이에 해당되는 대학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의 양적 확대로 고등교육은 보편화되었지만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이라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수준이나 발전정도의 격차만큼이나 그 경쟁력 면에서도 대학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맞물려 사회 경제적인 기회 역시도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이 느끼는 상대적

인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호남권 대학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의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 2005년도 수도권 대학의 전체 등록률이 97.6%인데 비해 영남권 소재 대학은 91.1%, 중부권 86%, 호남권 76.1%인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미충원을 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보이질 않고 있다. 사실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마저도 수도권의 대기업을 선호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인재 불균형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 할당제 시행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라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고질적인 인식이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출은 여전하며 지방대학의 침체 문제 또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미충원을 증가, 휴학을 상승,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생 증가로 발생한 학생 공백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지역의 경쟁력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구심체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존재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지방대학을 지역혁신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인식하여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이 반영돼 현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NURI)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많은 지방대학들의 기대 속에 시행된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으로서는 사실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카드가 되고 있다.

그렇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낙후된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사회·경제·문화적 위기를 극복할 주요 열쇠다. 이 때문에 범국가적인 과제로서 심각한 검토와 올바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각종 사회의 악순환 구조를 풀어가는 연결고리로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대학도 스스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각 대학들이 점진적으로 정원 축소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백화점식 학과로 수도권 대학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학의 시스템을 변화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며, 현장교육의 강화로 산업체의 맞춤형 실용주의 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겠지만 대학들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제화·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겠다.

지방대학의 미래 없이는 지역의 미래, 나아가서는 한국의 미래도 없다. ■■